

# 광주·전남 산업현장 물류대란 '심화'

## 광양·목포항 컨테이너 반출입량 연일 '뚝' 시멘트 수급난, 레미콘·건설업계 '발동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7주째인 29일 광주·전남 곳곳에서 물류대란이 심화하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광양항 컨테이너 터미널 2곳의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06TEU(20피트 규격 컨테이너 1대분)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달 기준 평소 같은 시간대 반출입량이 4625TEU인 것과 비교하면 2.29%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항만에서 반출하지 못한 컨테이너 화물이 쌓여있는 비율(장치율)은 61.5%다. 평소(61.4%)와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는 컨테이너 선적·환적 등 화물 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다.

목포항 일일 컨테이너 평균 반출입량인 211.6TEU를 크게 밑돌고 있다. 전날 하루 통틀어 컨테이너 125TEU가 오고 갔다. 장치율은 6%로 평소 수준보다 다소 높다.

주요 수출입 항만인 광양항은 장치율 80% 이상을 기록하면 물류 적체 현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파업 직전 화주·운송사가 파업에 앞서 긴급 또는 장기 적체 예상 수출·입 물량 선적을 항만에서 빼냈지만 일주일 이상은 버티기 어렵다고 항만업계는 전망한다.

지역 건설업계도 비상등이 켜졌다.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전국 각지의 시멘트 생산 출고량이 평소와 비교해 11%에 불과한 2만2000t으로 급감했

다. 이에 따라 레미콘 역시 15%만 생산되고 있다.

각 제조사들이 파업 직전 들어온 원자재로 생산한 시멘트마저 사흘 전부터 바닥 난실정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화물연대 소속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기사들의 운행 거부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레미콘 차량 기사들도 사실상 일손을 놓았다.

한 레미콘 기사는 "레미콘 차량은 파업 직후부터 오늘까지 7주째 멈춰 섰다고 보면 된다. 화물연대 파업 취지에 공감하고 응원을 보내면서도 한편으론 일감이 끊겨 착잡하다. 상당수 기사들은 생계가 곤경에 처했다"고 전했다.

각 건설사가 미리 확보·비축한 자재 물량에 따라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대부분 '공사 중단'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지역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 진척 상황 등에 따라 수시로 필요 자재를 반출입하기 때문에 보통 1~2주가 지나면 자재가 동이 난다. 시멘트 수급이 끊기면 현장 주요 공종인 철근 콘크리트 골조 공사부터 멈춰야 한다.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 등 추가 비용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고 밝혔다.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석유화학업체들도 파업 장기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유소에 정유제품을 공급하는 한 제조사는 파업으로 인한 수급 차질에 대비해 사전 출하량을 최대한 늘렸다. 정상적인 출하는 어려우나 화물연대와 협의 등을 거쳐 긴급 물량으로 하루 60~70대를 동원하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개별 주유소에서 공급 민원 등은 없으나 간신히 버티는 수준이다. 어느 산업 현장이나 마찬가지로 파업이 장기화되면 수급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기아 오토헤드 광주공장은 지난 25일 오전부터 이날까지 출고 완성차를 순차적으로 광동·전남 장성 출하장으로 개별 운송했다. 차량 탁송차(카캐리어) 파업 여파로 출하 차량이 공장 내 적치장에 가득 차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 평균 생산량 2000여 대씩 매일 출하장으로 탁송할 계획이지만 도로 사정에 따라 출하 차량 대수는 일정치 않다.

그러나 이 같은 물류대란 파장에

정부와 화물연대간 강대강 대치는 단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줄곧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의 업무 복귀를 강제하는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하고, 즉각 발동했다. 우선 피해가 크다고 판단한 시멘트 분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한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반헌법적 조치인 만큼 명령을 거부한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과 양심적인 법조계 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 흔들림 없이 총파업 투쟁을 펼칠 것이다"고 강력 반발했다.

화물연대 광주·전남지부도 이날 총파업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어 세뫼이 나뉜다.



**사랑의 김장배추 나눔** '엄궁농산물도매시장 2022년 사랑의 김장배추 나눔행사'가 열린 29일 부산 사상구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서 관계자들이 지역 내 복지시설 등에 전달할 김장배추를 배달차량에 옮기고 있다. 시장 유통종사자들이 이날 기부한 배추·무 1만4000포기는 사상구·사하구 새마을부녀회를 통해 지역 내 경로당 344곳과 서구 마리아수녀회 등에 지원된다.

## 장성 제조공장 부속 창고서 화재

28일 오후 8시 7분께 장성군 장성읍 한 건축자재 공장 부속 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다. 공장 1개 동 200여㎡가 대부분 타거나 그을렸다.

소방 당국은 진화 작업에 소방관 22명, 장비 9대 등을 투입해 신고 접수

10분여 만에 큰 불길은 잡았다. 또 급속기로 창고에 쌓여있는 자재 사이에 남아있는 불씨를 일일이 드러내며 잔불을 끄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장성=기동취재본부

## '교권 침해' 학생부에 남긴다 '피해 교사, 학생과 분리'

교육부가 교사의 수업과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교권침해' 관련 학생에게 내려진 징계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기기로 했다. 학생부는 대입 전형 자료로도 쓰인다. 당초 학생의 잘못이 '주홍글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를 바꾼 것이다.

교육부는 오는 30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남대문 호텔에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수업 중인 교사를 방해하거나 학부모가 수업 중 교실에서 교사에게 손찌검을 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추진된 교권침해 방지 대책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 9월 공개했던 같은 시간(초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보완한 방안을 논의한다. 교권침해로 인한 징계 기록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에 근거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기로 했다. 당초 초안에서는 "학생 낙인효과, 교사·학생 간 소송 증가 등 학내 갈등 발생 우려로 충분한 의견수렴 후 추진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입장이 바뀐 것이다.

교육부는 학부모, 전문가, 교원단체 등에 의견을 물어보니, 교권침해 징계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설명한다.

지난달 17~21일 교육부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 99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 학생부 기재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37%를 차지했다. 반대는 6%였다.

또 '전학·퇴학 등 사안의 무거움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기재한다'는 36%, 첫 조치는 적지 않고 두번째 교권침해 관련 학생이 받은 조치 사항부터 적는다 18%였다.

이런 의견을 바탕으로 교권침해 관련 조치 사항을 모두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고 별도 법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수준'에 한해서만 기록하기로 정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재 방식) 학교폭력과 동일하게 갈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라며 "교사·학생 관계라 교육적 잣대를 고민해야 한다는 뜻"고 전했다.

교권침해 관련 조치가 학생부에 적히려면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해당 법안에는 여야간 이견차가 있는 가운데 이날 오전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법이 개정되면 교육부는 교원지위법 개정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전학과 퇴학 수준의 징계를 받은 경우 한해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올해 1학기 교권침해 관련 조치를 받은 학생은 1412명으로 이 중 141명이 전학, 20명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는 195명이 전학, 41명이 퇴학 당했다.

교사의 '생활지도권'에 대한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내용이 새로 반영됐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조문이다.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침해 학생과 즉시 분리하고, 분리된 학생에게도 교육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필수 시 교권침해를 저지른 학생에게 학교봉사, 특별교육, 심리치료, 출석정지를 우선 실시하고 이후 교권보호위원회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학생이 선도 조치를 거부하면 추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뉴시스



## 광주 동부소방, 학교로 찾아가는 '119안전체험'등 운영

광주 동부소방서는 조선대학교, 여자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119 안전체험' 및 불조심 강조의 달 홍보부스를 운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슬비기자



## 광양소방, '안전하기 좋은 날' 캠페인 실시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최근 중마사랑요양원 등 중마동 일대에서 '안전하기 좋은 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광양=김현근기자



## 진도소방서장, 관내 요양원 화재안전관리실태 현장지도 방문

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최근 진도군노인전문요양원과 효사랑복지원에 방문하여 화재 등 재난 취약요인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 담양소방, 담양 다문화 어울림 축제 '소방안전교육 체험부스'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지난 26일 담양교육지원청과 협업체하여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 체험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 완도소방 119생활안전순찰대, '금당 비건도 비상구급함' 설치

완도소방서(서장 김옥연) 119생활안전순찰대는 완도군 금당 비건도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일반 상비약 및 의상처리 물품이 포함된 "비상구급함"을 설치하였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나주경찰, 나주시니어클럽 교통안전 교육 실시

나주경찰서(서장 박상훈)는 지난 나주시민회관 노노케어(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행사) 행사에서 각 읍 면 동 어르신들 25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 했다고 밝혔다.

나주=송준표기자